

새만금 중심 RE100 산단 조성 방향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역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역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지역 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북자치도, 민주 이원택 의원실과 공동 토론회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 위한 법 개정 등 논의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산업단지 내 활용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책임연구위원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준신 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KAIST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회로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재

생에너지 전력자립도를 기반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신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는 "글로벌 기후 대응 기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국내 여건은 제약이 많다"며, "새만금처럼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소비형 모델을 통해 RE100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 사용 구조에 맞는 유연한 공급 모델을 통해 RE100 산업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서는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KAIST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북 자치도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해성과 학생 대상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21일 전주해성고등학교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해마다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해성고 담당교사는 "선거교육 콘텐츠가 부족해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선관위 전문 강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형화된 산불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 앞장”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성명서 발표

산불 진화 및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화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총력을 당부했다. 성명에 따르면, 2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4명의 진화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불특수진화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도 관계 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산림재난방지법안을 통과시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산불이 발생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산불 원인을 파악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된 산불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립·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은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27일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 신속 진행하라”

민주노총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3월 27일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김종태 건설노조 전북본부장, 이상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이어 최영식 민주노총 정읍시지부장과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미루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한발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3월 27일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 경제 파란,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는 즉시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농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항쟁이 될 것”이라며 “상인들은 가게를 닫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고, 모든 시민이 광장으로 나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4일 현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 102일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탄핵심판 역사상 최장기 심리 중 하나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직에 복귀하면서 대통령 관한대행 역할도 다시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24일, 제271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반안전 심사 등이 진행됐으며,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남원시 농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과 지역화폐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역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태 의장은 “매서운 추위가 가고 봄이 왔지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산불위험이 커진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의회, 3월 의원간담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24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3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15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가 제안한 '2025년 의사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과 '제28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사업계획들이 검토됐다.

의원들은 교육문화과의 '김제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계획안'을 검토하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기획 참여와 소통 공간 지원에 주목했다. 특히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과 지역 사회 연계 멘토링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소년 보호·선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유치과가 보고한 '2025년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반값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김제시는 산업단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인해 유입될 청년·근로자들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업정책과가 제출한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공약률 김제 농공산업 거점지구 신청계획안'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부서별 보고가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각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검토했다.

3월 의원간담회를 주재한 이정자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안전을 비롯해 김제시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 도당 “현재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유감”

“尹 탄핵 선고 기일 확정·완료해야… 국민 요구에 부응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은 김솔지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무총리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현재가 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행태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의 시작이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재가 하루빨리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고 이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4월이 오기 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현재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켰다.

발표를 맡은 김솔지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시간은 이제 정점을 찍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현재의 역할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태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적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한 법적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무기단식 중단

시군 대표단 릴레이 단식 전한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방용승 공동상임대표가 무기 단식 14일째인 24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방 대표는 병당 저하와 심각한 무기력증, 현기증 증세를 보여 전주 우석대한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사는 단식 지속 시 쇼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각계 인사들이 전북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방 대표와 주요 단식 인사들의 건강을 우려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대표단과 여러 국회의원

및 종교계 인사들이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과 체력 회복을 촉구했다.

이에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시군공동대표단은 긴급회의를 열어 단식 지속의 위험성을 논의한 끝에, 무기단식을 중단하고 릴레이 단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방용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단식 인사들은 이 제안을 수용해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군 대표단은 릴레이 단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며, 첫 릴레이 단식은 전주 대표단이 시작하며, 이후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생애 마무리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임종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윤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윤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